

오늘의시선

〈한겨레〉에서 시민사회 토론 공간으로 제공한 지면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고 인신공격을 멀리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이름과 직함, 연락처,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고요. 청탁 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짜임으로 원고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opinion@hani.co.kr, debate@hani.co.kr, 팩스 02)710-0310

■ 촉법소년 연령 인하 어떻게 볼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가 포함됨에 따라, 지난달 법무부가 관련 태스크포스팀(팀장 차순길 정책기획단장)을 꾸렸다. 정부 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진 만큼, 태스크포스팀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현재 10살 이상~14살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두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앞서 살피고 짚어볼 대목은 없는지 두 전문가의 글을 실는다.



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넷플릭스 제공

처벌 안받거나 수위 미약? 촉법소년 관한 오해 심각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재 13살에서 11~12살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초등학교 5~6학년도 죄질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구금되고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얘기다. 이런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난무해,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우려가 크다.

우선 소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소년법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사책임을 저야 하는 법 위반자가 미성년자일 때, 그들을 어떻게 처벌(처우)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특별법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살 이상~19살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이를 세분화해 10~13살은 촉법소년, 14~18살은 범죄소년으로 규정한다.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면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관찰은 물론, 구금형인 소년원 처분(최대 2년) 등을 받는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부 인식, 언론의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오해가 많다.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촉법소년(범죄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는데, 그때마다 각국의 형법에 명시된 형사책임 나이를 종합한 표(오른쪽)가 수없이 인용됐다. 이 표를 처음 제시한 보고서와 학자들은 해당 표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명백히 기술했지만, 잘못된 해석과 오해가 확대·재생산됐다. 외국은 형법의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의 '소년' 연령 기준이 일치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은 12살이며, 소년법상 소년은 12살 이상 18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14살부터는 죄질이 중한 경우 형사처분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형법의 형사책임연령은 14살이지만, 소년법의 소년은 10살 이상 19살 미만이며 14살부터는 죄질이 중한 경우 형사처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서는 처벌(처분) 대상이다. 결국 형법(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소년의 범위)의 불일치로 인한 혼동과 오해가, 처벌할

연령	국가
7(32개국)	태국,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카타르,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8(10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케냐, 잠비아, 스코틀랜드, 서사모아 등
9(6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벨리즈, 오만, 몰타
10(18개국)	호주(수도연방주, 퀸즐랜드주), 뉴질랜드, 스위스, 중국, 영국 등
12(17개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모로코, 그리스 등
13(18개국)	프랑스, 부룬디, 아이티 등
14(40개국)	대한민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등
15(8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라오스 등
16(14개국)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몽골, 스페인, 쿠바, 마카오 등
18(5개국)	룩셈부르크,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기니, 벨기에

수 없는 소년법 범위가 넓다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 10살부터 보호처분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선진국들보다 처벌 범위가 넓으면서도 말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입각해 우리나라와 반대로 '소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법상 형사책임연령 하한선을 14살로 유지하고 12살 이하로는 낮추면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소년법 강력처벌이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증거)를 토대로 형사처분과 형사책임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도 형사책임연령을 기존 10살에서 12살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행은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건강할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실증자료를 토대로 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이 필수라는 얘기다. 그 첫걸음은 우리나라 소년법·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년범죄, 원인부터 살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촉법소년·소년범죄 문제는 가장 많은 호응을 끌어낸 주제다. 하지만 이에 관한 대중의 분노와 냉소, 일부 공포한 강력범죄에 편중된 언론 보도는 엄벌주의만이 해결책이라는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도 크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성숙했고, 정신적으로 영악해져 범죄도 나날이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이 영악해진 데에는 정보화 사회의 영향이 크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최첨단 기술의 총아인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 아이들은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범죄 관련 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낸다. 초·중학생과 중고생도 시·공간 제약 없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할

수 있고,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범이 될 수 있다. 보호자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렌터카업을 통해 차를 빌리면 무면허 운전도 가능하다. 속도와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10대들은 예전보다 충동적이고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범죄가 스마트폰 몇번 터치하면 가능한 환경 속에서 범죄의 유혹이 쉽게 빠져든다.

여기에 비행청소년 상당수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거나 가정이 해체돼 방임되고, 가정폭력과 학대의 피해자다. 입시경쟁에 바쁜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청소년들을 끝까지 감싸 안을 여유가 없다. 결국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들을 준거집단으로 삼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이처럼 복합적이고, 소년법은 스마트폰 속 세상과 현실을 수시로 오가며 충동적으로 비행하는 입체적 인물이다. 따라서 소년법 혐오에 기반한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냉철하고 합리적인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포토에세이



누더기 차림표 불안한 마음

지난해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만든 차림표가 차츰 물가 때문에 누더기가 됐다. 가게 주인은 올라도 이렇게 빨리 거의 모든 식재료가 한꺼번에 오를 줄 몰랐다고 울상이다. 임시로 붙여놓은 가격표를 떼고 새로 만든 깔끔한 차림표를 내걸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물가가 언제 더 올라 가격표를 덧붙여야 할지 모르니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래저래 불안한 마음으로 차림표를 바라보는 손님이나 주인이나 마찬가지다.

윤윤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비선·지인 동원 '김건희 블랙홀' 어떻게 해야 할까

퍼스트레이디 보좌 공조직 신설을



안명섭 전 MIT 정치학과 초빙교수

최근 30%대로 떨어졌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인가?"라고 묻고 있는 듯하다. 이제 막 출범 두달을 넘긴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국민의 실감 배경에 있는 '비선', 사적 채용 논란 등은 큰 그림에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적어도 일부가 민주적 제도들 밖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 대통령은 시급한 국정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민심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순리다. 그 단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국정이 일부라도 제도 밖으로 탈선해 정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대의민주주의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민주적 제도들을 통해 행사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방문할 때 공식 수행팀에 사적 지인을 포함해 비선 개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곧이어 윤 대통령 부부가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할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윤 대통령과 그 보좌진의 공적 윤리관을 의심하게 했다. 대통령실과 공적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외국에서 대통령 부부와 일정을 함께한 것은 공식사회 기강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적절한 행위다.

이런 논란에 윤 대통령 쪽은 사적 지인이라는 이들을 두고 "무속인이 아닌 대학교수" "부산 친구"라고 두둔하며, "장기 해외 체류 경험" "영어 실력" "국제행사 기획능력" 등 표현을 써가며 동문서답식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런 행위가 공사 구분, 공정성, 민주적 권력행사 등을 훼손했는지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보인 대응은 '코바나콘텐츠 출신 직원 2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계획'이라는 게 전부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언론에 "김건희 블랙홀"(국민의힘 관계자)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김 여사 활동 보폭이 늘어나면서 여야에서는 퍼스트레이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기에 '퍼스트레이디'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이번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퍼스트레이디는 외교, 복지,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공적 활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퍼스트레이디는 법이 보장하는 특권을 누리는 한편, 개인적 자유와 권리는 일정 부분 제약받는다. "케이크를 갖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는 없다"는 영어 속담처럼 말이다. 미국에는 백악관 대통령집무실(오벌 오피스)이 있는 웨스트윙 반대편 이스트윙에 퍼스트레이디실이 있고 사회담당 비서관(social secretary)과 그 스태프들이 퍼스트레이디를 보좌한다.

둘째,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는 국정운영과 관련한 최고급 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기 마련이다. 대통령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최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근거리 정책결정자(PPM: proximate policy maker)'들 가운데서도 퍼스트레이디는 첫번째로 손꼽힌다. 따라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 투철한 공적 윤리를 지닌 보좌진이 퍼스트레이디 활동의 보안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담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최순실게이트에서 가장 본질적 문제는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막강한 지근거리 정책결정자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관저팀" 직원 2명이 최순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셋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의 초반부 승리로 인한 정권 정당성(regime legitimacy)이 취약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비선 개입, 사적 채용 논란은 허약한 정권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위기의 주원인은 정치지도자의 자질 부족이라고, 지난해 타계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도널드 케건 예일대 교수는 강조했다. 지금 같은 국정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이 정부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유정복 시장님, 지금 시민들과 장난하는 겁니까?”

이상진

인터넷 자문자신론(오토다이어리) 기자

10년 전인 2012년 10월 연장 개통된 지하철 7호선은 인천·부천에서 환승 없이 한번에 서울 강남지역을 오갈 수 있는 노선으로 시민들의 중요한 발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당시 종점이던 부평구청역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6416명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3만6952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열차 배차간격도 8분에서 6분, 4분대로 줄었다.

문제는 이달부터 터졌다. 출근시간 열차 배차간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평구청역 기준 아침 6시대 서울로 향하는 열차 평균 배차간격은 10~13분으로 확대됐다. 7시대 열차 배차간격도 7시27분까지 8분대로 늘었다. 7

시43분~8시34분 50분 동안에만 기존처럼 4분 간격 배차가 이뤄지고 있다. 아침 6시~7시30분 사이 열차 배차간격을 갑자기 2~3배 늘렸으니, 열차는 기존보다 2~3배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달려야 한다. 열차 안 혼잡도가 증가해 승객들의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불필요한 스킨십으로 안성을 높이는 일도 빈번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천교통공사는 "직장인들과 회사원들이 몰리는 집중 출근시간인 7~8시대 집중 배차했다"고 말했지만, "웃기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싶다. 인천에서 그 시간에 강남 인근 직장까지 이동하려면 10시나 돼야 도착한다. 인천과 부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대개 6시대에, 늦어도 7시대에 지하철을 타야 출근시간인 8~9시까지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탁상머리 행정에 시민들만 골탕을 먹게 된 셈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이용객이 늘고 노선이 길어지면 거점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출퇴근시간 동안 객차 안 불쾌지수를 낮추고, 열차운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대표적인 거점역인 부평구청역 출발 열차가 사라졌다.

유정복 인천시장님, 정희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 묻고 싶다. 지금 시민들과 장난하는 겁니까? 시민들과 솔대없는 소모전 하지 마시고, 지하철 배차시간은 원상대로 복구 바랍니다. 시민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할 자신 없으면 서울교통공사에 7호선 운영권 다시 가져다 주세요. 시민들의 공공재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